

‘깜깜이 예산’ · ‘줄어드는 전임’, 해결할 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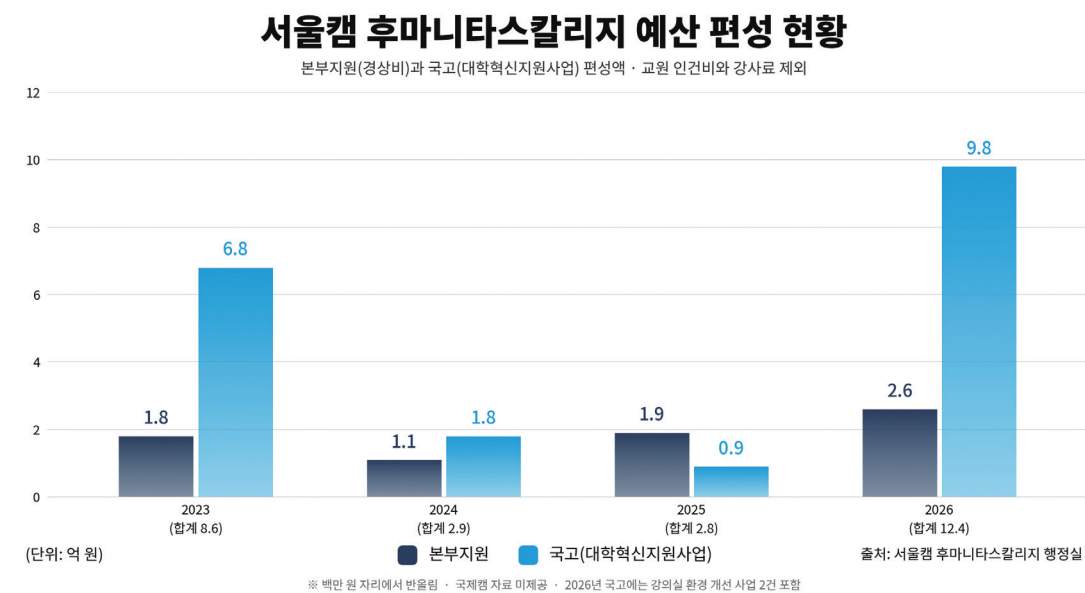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창간 71주년 특별기획 후마니타스 15년을 묻다 2부

- ⑤ 교수 · 과목별 편차
- ⑥ 교육과정 개편
- ⑦ 평가방식
- ⑧ 거버넌스
- ⑨ 재정 · 인력

2011년 출범한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양 교육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구성원의 자부심으로 자리잡았다. 우리신문은 15년이 흐른 지금, 교양교육의 전범으로 불리던 후마가 설립 당시의 철학과 역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되짚고자 한다. 2부 5회차에선 후마의 교육을 뒷받침하는 재정 · 인력 문제를 다룬다.

후마 특별기획과 관련해 취재하는 동안 후마 교수진은 대체로 ‘후마에 대한 지원 부족’을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5월, 154명이 응답한 우리신문의 후마에 대한 교수 인식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사안으로 ‘교원·강좌·예산 등 운영 여건’이라는 응답이 1위 (29.5%)를 차지했다. (관련기사: 교수들이 본 후마의 과제 ‘지원 회복’과 ‘양캠 소통’/대학주보 1761

호/2026.05.25.)

후마의 예산 구조와 교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교수들이 말하는 재원·인력 부족은 실제로 후마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해진 몫 없이 건별로 신청해야 하는 예산 구조와 해마다 줄어드는 전임교원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

었다. 불확실한 지원 여건 속에서 새로운 교육을 기획하고 이끌어 갈 후마 내부의 동력도 함께 약해졌다.

자율예산 없는 후마 교육활동 뒷받침해 온 국고지원

후마는 일반 단과대학과 달리 소

속 학부생이 없기 때문에 학생 수에 따라 배정받은 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율예산’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대신 후마 예산안은 매 학년도 본부 차원에서 편성되고 있다. 기획조정처 예산팀은 “후마는 자율예산이 아니므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 아니고, 사업별 예산요구를 접수받아 재정상황에 따라 중요도 등을 고려해 배정한다”고 밝혔다.

교원·교직원 인건비와 강사료는 해당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본부가 별도로 지급한다. 국제캠 후마 행정실 정구승 실장은 “자율예산과 예산이 쓰이는 항목은 거의 비슷한데 형식만 다를 뿐”이라며 “편성된 예산안 외에 특별한 사업이 있거나 필요하면 본부에 별도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강좌 개설 수 또는 대략적인 실험·실습비 윤곽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 규모가 편성된다”며 필수적인 운영 경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6면에 계속 →

4면에서 계속 →

서울캠 김진해(국어국문학) 부학장은 양캠 PD 전체가 처음부터 한 회의에 참여하면 인원이 많아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캠에서 먼저 TF를 꾸린 뒤 국제캠 부학장에게 연락했으며, 국제캠에서도 별도의 TF를 구성해 논의한 후 양캠이 함께 만나 공통분모와 이견을 확인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협의가 실제 공동 조정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할 상설 구조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김 부학장은 취재 당시 국제캠 TF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을 두고 “이제 그러면 또 나중에 가서 갈등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후마 설립부터 지난 2022년까지 후마 소속이었던 자유전공학부 배재형(수학) 학부장도 설립 당시와 비교해 양캠의 ‘유기적 협업’이 약화되고 교육·행정 운영이 개별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은정 교수 역시 “양 캠퍼스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교양교육 단위와 성적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승주 교수는 “현안이 생겼을 때만 만나는 방식보다 평시에 만나는 정기적인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 2학기 국제캠 후마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 면접이 열린 멀티미디어관 513호 앞에서 중핵교과 교수회의 대표위원들이 채용 중단을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대학주보 DB)

의견 엇갈려도 공동 결정 범위부터 정해야

이런 과정에서 양캠 공동 논의구조 마련을 위해 11년간 공식으로 비워둔 대학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리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칙 제78조에 따라 대학장 직위는 공식 직제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본부를 통해 후임 대학장이 장기간 선임되지

않은 배경과 현재 양캠의 이견을 조정하는 공식 주체를 물었으나, 총장실은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교수진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시각도 있다. 이은정 교수는 “양캠 학장과 교양교육 관련 조직 등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해 부학장은 “대학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학

장을 세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캠 학장 간의 실질적인 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후마 거버넌스 체계를 캠퍼스별 특성에 맞게 분리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양캠 후마는 후마 출범부터 이어진 평가방식 전환에 대한 입장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24년 절대평가 전환 논의가 서울캠 총학생회 주도로 이뤄졌을 때도 서울캠

은 우선 시행을, 국제캠은 충분한 준비와 단계적 접근이라는 평행선을 달렸다. 현 구조의 한계를 구성원들이 체감하게 된 셈이다.

서울캠 정복철 학장은 “왜 하나여야 하느냐”며 제도적으로는 같이 가되 캠퍼스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봤다. 정화영 교수 역시 후마가 하나의 기관인 만큼 제도적 문제는 함께 갈 수밖에 없지만, 교과 내용은 캠퍼스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고 봤다. 김성 교수도 캠퍼스별 자율 운영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만 그 범위 역시 양캠의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캠퍼스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그 자체를 양캠이 먼저 합의해야 한다”며 자율 운영의 범위 역시 공동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재 결과, 양캠 후마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교과별 소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현안이 생기면 양캠 교수와 보직자가 만나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을 함께 결정하고, 무엇을 각자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양캠 후마가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음을 확인했다.

후마 통합에 필요한 전제 조건은 공동 운영의 범위와 캠퍼스별 자율성을 함께 정할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